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2월 | 부패영향평가

2026 February | vol.158

Brief

1	국민권익위원회 「2024 부패영향평가 사례집」의 핵심 진단 항목 중 '특혜 발생 가능성', 혜택 부여 요건의 명확성, 특정 집단에 대한 수혜 집중 여부, 유사 사례 대비 형평성 등을 중점 점검
2	2025년 부패영향평가 결과, 법령 1,357건 중 122개 법령에서 247건 개선 권고가 이루어졌으며, 주요 사유는 예측가능성 부족(32.0%)과 재량규정 불명확(25.5%)
3	공급망 부패 및 윤리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공급 ESG 평가, 행동규범, 구매관리 지침을 마련한 유한양행
4	2026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580개 기관으로 확대, 이해충돌방지 이행과 청렴교육 등 평가 항목에 반영
5	금융위는 중대범죄 계좌 동결 권한 추진, 가상자산 AML 강화 등 발표, ESG 공시는 Scope3 포함 및 대기업 단계적 의무화 논의
6	2026년 ESG 환경은 AI 확산에 따른 기후-에너지 리스크 대응과 ESG 데이터 기반 재무성과 입증 역량이 핵심 경쟁요소

목차

1 윤리 체크리스트	부패영향평가로 보는 특혜 진단 국민권익위원회, 2024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2025.7)
2 사례 돋보기	부패유발요소 평가 사례 유한양행
3 윤리, 지금	권익위 동향 202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발표 청와대 앞 '현장 경청 상담버스' 운영 2025년 법령 1,357건 평가, 247건 개선 권고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기업 맞춤형 현장 교육 실시
	국내외 동향 금융위, 2026 자금세탁 방지 주요업무 계획 발표 국제투명성기구(TI), 2025 국가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 금융위, ESG 공시기준·로드맵 이달 말 발표 ESG 핵심과제, AI 대응 역량과 재무성과 입증
4 윤리 네컷	판단 어려운 규정, 공식적으로 확인하세요!
5 행사	

부패영향평가로 보는 특혜 진단



국민권익위원회,
2024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2025.7)

- **부패영향평가:** 법령·제도의 유발 요인 사전 진단 제도
- **특혜발생 가능성 진단:** 특정한·단체에 구조적으로 유리한 혜택이 발생할 여지 진단
- **진단 기준:** 수익 부여 요건의 명확성, 수혜 대상의 집중 여부, 유사 사례 대비 형평성 검토

특혜발생 가능성 진단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특혜발생 가능성 체크리스트

'부패영향평가'란 법령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될 경우 이를 사전에 정비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부패방지시스템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 부패영향평가 사례집(2025)'을 발간해 법령과 제도 설계 단계에서 부패 유발 요인을 사전에 진단·개선한 사례를 제시한다.

보고서는 공공 법령을 다루지만, 재량권의 과도한 부여나 모호한 예외·특례 조항과 같은 구조적 취약성은 기업의 인사·구매·협력사 선정·예외 발주 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 역시 해당 보고서를 참고하여 내부 규정과 의사결정 구조에 특혜 발생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지, 관련 부패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다. 이번 윤리 체크리스트에서는 주요 진단 항목 중 기업에 적용 가능한 체크리스트 중 '특혜발생 가능성' 부분을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부패영향평가에서의 '특혜발생 가능성' 평가는 법령 등으로 인해 특정인 또는 단체에게 특혜나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 혜택을 획득·유지·확대하는 과정에서 부패행위가 발생하거나 용인될 위험이 있는지 진단하는 개념이다. 이는 단순히 혜택의 존재 여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가 부패로 전환될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부패영향평가에서는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요소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구체적인 진단 항목은 오른쪽 표와 같다.

첫째는, 수익적 규정 여부이다. 이는 혜택 부여의 요건·대상·절차·목적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수익 내용이 하위 규정에 위임된 경우 그 범위와 기준이 적정한지를 확인한다.

둘째, 특정 계층·기업에 대한 수익 집중 가능성이다. 혜택의 수혜 대상이 특정 집단에 사실상 한정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구조로 작동하지는 않는지를 점검한다.

셋째, 유사 사례와의 적정성·형평성이다. 혜택의 내용과 수준이 다른 유사 제도와 비교해 과도하지는 않은지, 합리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검토는 기업 내부의 구조적인 특혜 유발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설계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특혜발생 가능성 진단 체크리스트>

검토항목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법령 등이나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이나 이익(법률상·사실상의 이익 포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혜택이나 이익 수혜대상이 여타 다른 법령과 비교·검토 시 특정 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내용·정도가 타 법령 등의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것은 아닌가?	
<input type="checkbox"/>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출처: 국민권익위, 2024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2025.7)]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2024 부패영향평가 사례집\(2025\)](#)

부패유발요소 평가 사례

사례기업: 유한양행

핵심 키워드: #공급망 관리, #협력사 평가 기준, #부패 예방

- **부패가능성 초기 진단:** 협력사 선정 및 거래 과정에서 서면진단, 현장실사를 통한 윤리 준법리스크 점검
- **행동규범 기반 평가:** 협력사 행동규범의 핵심 내용을 평가 항목에 반영해 실질적인 관리수단으로 활용
- **지속적 사후 관리:** 고위험 협력사에 대한 개선 요구와 모니터링을 통해 부패 리스크 지속적 관리

‘유한양행 부패유발요소 평가 사례’ 협력사 관리를 통한 공급망 부패 리스크 예방



1 부패가능성 초기 진단

서면진단·현장실사를 통한
윤리 준법리스크
사전 점검



2 행동규범 기반 평가

협력사 행동규범을
평가 항목에 반영해
실질적 관리



3 지속적 사후 관리

고위험 협력사
개선 요구 및
이행 모니터링

유한양행

유한양행은 국내 제약회사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실시하는 ESG 평가에서 올해 AA 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컴플라이언스 위반 이슈의 부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제약산업은 공급망 전반에 걸쳐 부패 및 윤리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유한양행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협력사 대상 ESG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서면진단과 현장 점검을 통해 공급망 단계에서의 잠재적 부패 가능성을 사전에 식별·관리한다. 협력사 평가 체계와 주요 기준은 유한양행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ESG 기반의 책임 있는 구매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협력사 행동규범과 구매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이는 윤리경영체계와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준법경영시스템(ISO 37301), 국내외 법령을 포괄하며, 관련 법·규제 변화, 국내외 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된다. 협력사 선정 시에는 비용·품질·납기 외에도 ESG 요소를 반영한 평가를 실시한다. 주요 평가 항목은 오른쪽의 표와 같다.

또한 연 1 회 협력사 대상 ESG 진단을 실시하여, 공급망 내 잠재적인 ESG 리스크 또한 평가하고 있다. 이는 GRI, CDP, RBA 등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활용하며, 주요 항목에서는 '윤리'영역에서 컴플라이언스 준수, 내부고발자 보호 등도 다뤄진다.

유한양행은 협력사 평가에 앞서 ESG 관련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평가 이후에는 협력사들이 객관적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 등급 분포도를 공유하기도 한다. 개선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안내하고, 필요 시 지원을 병행해 협력사의 ESG 역량 강화를 돕고 있다.

2024년에는 평가에서 잠재리스크가 식별된 협력사 중 추가 검토가 필요한 3 개 협력사에 현장 방문, 서면 점검을 통해 이행 현황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개선 요구사항 전달과 함께 실질적인 지원을 병행하기도 했다.

<유한양행-협력사 주요 평가항목>

주요평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체 규모 및 시공 능력● 유사 프로젝트 수행 실적● 재무 건전성 및 신용 등급● 기존 거래 이력<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질 이슈, 반품 이력, 납기 지연 등● 품질, 원가, 납기 등 전반적인 수행 역량● 제안 금액 및 계약 조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현황 및 대응 수준

<협력사 ESG 평가 주요 항목>

1. 서면심사	- 협력사 ESG 평가지표를 이용한 데스크 평가 (자가점검 또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등 공개된 정보 기반 위험도 파악)
2. 현장진단	- 현장 실사를 통해 리스크 수준 정밀 진단
3. 결과 도출 및 개선 활동	- 고위험 협력사에 대한 개선 계획 수립 - 개선 필요사항 전달 및 지원 - 이행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출처: [유한양행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4-2025](#)]

참고

[유한양행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4-2025](#)

[비즈니스 포스트, "유한양행 MSCI ESG 평가에서 AA 등급 받아, 2년 연속 상향"\(2025.06.12\)](#)

권익위 동향

권익위 정책

202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2월 11일 '202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총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국공립대학, 지방공사·공단 등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청렴도 감점 세 영역으로 구성된 평가체계를 정비해 감점 항목을 통합 개편했다. 특히 청렴노력도에는 미래세대 청렴교육, 이해충돌방지제도 이행 등이 새롭게 반영되며, 'K-CLEAN' 평가모형을 통해 제도 이행성과를 체계적으로 진단할 계획이다. 최종 결과는 12월 발표된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2월 11일
https://www.aarcgok/boards?mid=a10402010000&bid=4A&act=view&lst_no=104448

청와대 앞 '현장 경청 상담버스'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1월 27일부터 2월 말까지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현장 경청 상담버스'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는 청와대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노숙하는 장기 민원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권익위 조사관이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주하며 민원 상담과 신청을 지원한다. 추운 날씨에 몸을 녹일 수 있는 공간도 제공되며, 필요 시 민간 심리상담사를 통한 전문 상담도 함께 진행된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통해 민원인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자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1월 29일
https://www.aarcgok/boards?mid=a10402010000&bid=4A&act=view&lst_no=103845

권익위 활동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기업 맞춤형 현장 교육 실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2026년 민간기업의 부패 리스크 대응 역량을 높이고 윤리문화 내재화를 돕기 위한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은 5월부터 12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기업 임직원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난해보다 3회 늘어난 규모다. 신청한 기업별 업종 특성과 협의에 따라 글로벌 반부패 규범, ESG 동향, 윤리경영 제도, 업종별 부패위험 관리방안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콘텐츠가 구성된다. 교육 희망 기업은 2월 27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양식, 세부 일정은 누리집(edu.acr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육원은 윤리경영 담당자 대상 분기별 세미나도 기획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AI 윤리, 준법감시 등 최신 이슈를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일정은 추후 공지된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2월 5일
https://www.aarcgok/boards?mid=a10402010000&bid=4A&act=view&lst_no=104448

부패영향평가 실시, 부패유발요인 247건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된 법령 1,357건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 중 122개 법령에서 부패 유발 요인 247건을 찾아 개선을 권고했다고 2월 4일 밝혔다. 권고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예측가능성 부족'(79건, 32.0%)이었고, 이어 '재량규정의 불명확성'(63건, 25.5%), '과도한 제재'(27건, 10.9%)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보건, 산업·개발, 국방·보훈 분야에서 개선 권고가 집중됐으며, 개선된 법령의 절반 이상(53.3%)은 대통령령이었다. 권익위는 장애아동센터 운영기준 마련, 부동산 사업평가기관 지정요건 명시, 체육단체 징계 시효 규정 등 구체적 사례를 통해 재정 누수, 과도한 재량 남용 가능성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2월 4일
https://www.aarcgok/boards?mid=a10402010000&bid=4A&act=view&lst_no=104080

국내외 동향

반부패 정책

ESG

금융위, 2026 자금세탁 방지 주요업무 계획 발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월 5일 '2026년 자금세탁 방지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중대 범죄 관련 계좌를 금융당국이 자체 동결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약·도박 등 초국가적 민생 침해 범죄에 선제 대응하고 범죄 자금 회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보이스피싱 등 일부를 외에는 법원 결정 없이 계좌 동결이 불가능하다. FIU는 자금세탁 범죄의 지능화·조직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신속한 권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제 범죄조직을 금융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테러자금금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관련 조직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다. 지정 시 금융거래는 금융위 사전 허가 없이 불가능하다.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감시도 강화된다. 가격 변동성이 낮고 거래가 활발한 특성상 자금세탁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발행업자에 금융사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고, '동결·소각 기능' 탑재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이행평가를 법정 의무화하고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 한국경제 2026년 2월 5일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47589?lfrom=kakao>

국제투명성기구(TI), 2025 국가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

2025년 국가청렴도 평가에서 한국은 63점, 순위는 3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점수와 순위가 1점(1순위)하락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하락 원인으로 정치적 불확실성과 기업인 대상 설문 점수 하락을 지목했다. IMD 국가경쟁력지수도 전년 61점에서 49점으로 하락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법제 정비, 공정 채용 강화, 고위공직자 가족 금품 수수 처벌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청렴도 순위 회복과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한국경제 2026년 2월 10일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58351?lfrom=kakao>

금융위, ESG 공시기준·로드맵 이달 말 발표

국내 지속가능성(ESG) 공시제도 도입의 윤곽이 구체화됐다. 금융위원회는 2월 4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ESG 금융추진단 제 6차 회의'를 열고 국내 ESG 공시 기준 최종안과 단계적 도입 로드맵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공급망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하는 '스코프 3(Scope3)'을 공시 항목에 포함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다만 기업 부담과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해 적용 시점을 즉시 확정하지 않고,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는 방안에 무게가 실렸다. 의무화는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제도 초기에는 한국거래소 공시를 활용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 안착 이후 법정 공시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위는 이달 말 '생산적 금융 대전환 4차 회의'에서 ESG 공시 기준 최종안과 단계적 도입 로드맵 초안을 발표하고,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4월까지 제도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매일경제 2026년 1월 <https://www.mk.co.kr/news/stock/11952815>

ESG 핵심과제, AI 대응 역량과 재무성과 입증

국내 ESG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는 3일 '2026 ESG 포커스' 보고서를 통해 올해 ESG 시장의 성패가 AI 확산에 따른 리스크 관리 역량과 ESG 데이터를 통한 재무성과 입증에 달려 있다고 전망했다. AI 산업 성장으로 전력·용수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후 리스크 대응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으며, 기후 전략도 '감축'에서 '감축과 적응'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국내에서도 상법 개정 논의,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확대, 산업안전·개인정보보호 과징금 상향 등으로 ESG 리스크가 기업의 직접적 비용 부담으로 연결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지배구조(G) 지표의 재무 예측력이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2026년 2월 3일 <https://www.yna.co.kr/view/AKR20260203053300008>

판단 어려운 규정, 공식적으로 확인하세요!



2026 글로벌 통상 분쟁대응 포럼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경쟁력 제고와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 플랫폼으로 기획된 세미나

- 주최: 대한상공회의소&리틱에쿼티파트너스 (LITIG Equity Partners)
- 일정: 2026년 3월 11일(수)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
- 참고:

https://www.korcham.net/nCham/Service/Event/appl/KcciNewsDetail.asp?DATA_ID=20260206095712309571K000&CHAM_CD=B001&BIZ_SEQ=000

제35회 ESG ON 세미나

포장재 생산부터 폐기까지, 국제 환경규제 동향과 대응'을 주제로 ESG분야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

- 주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일정: 2026년 2월 25일(수)
- 장소: 비대면 웹 세미나
- 참고:

https://www.gmi.go.kr/np/boardDetail.do?targetPage=portal%2Fnp%2FBoardList&searchTx=&pageIndex=1&no=3862&menuCd=9080&bbsCd=ESG_ON_SEMINA

독자 의견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2월호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독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더 나은 콘텐츠로 개선하려 합니다.

아래의 질문에 대한 의견 또는 질문을 남겨주시면
5명을 추첨하여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 ① 이번호에서 다룬 주제 또는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 ②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셨나요(또는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요)?
- ③ 기타 의견(다뤘으면 하는 주제, 기업 사례 등)
- ④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하고 싶은 사항

의견남기기 <https://quiz.assist.ac.kr>

2026년 2월 28일(토)까지

(1) ['의견남기기'](#) 페이지에서 응답하시거나

(2)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korea@assist.ac.kr) 앞으로
의견과 성함, 연락처(휴대폰 번호)를 보내주세요.

*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 발송 정보로만 활용되며, 추첨 이후 파기됩니다

★ 국민권익위 문의 창구 개설 안내 ★

업무 중 궁금했던 제도·해석 사항이 있다면 독자 의견과 동일한 경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취합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식 문의 후 답변을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기프티콘 당첨자 안내

박○숙님, 홍○기님, 정○숙님, 최○혜님

귀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민원상담 신청부터 결과확인까지 온라인으로 한번에 끝내기

법령·제도·행정 등 민원상담은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 | |
|----------|--------------------------|
| ① 상담신청 | 국민신문고 ▶ 민원상담·안내 |
| ② 상담관지정 | 민원 내용에 따른 상담관 지정 |
| ③ 사실관계조사 | 관계 법령 검토 및 자료조사로 사실관계 확인 |
| ④ 결과확인 | 국민신문고 ▶ 민원상담 신청결과 |

부패·공익신고는 ▶ 청렴포털 www.clean.go.kr

- ① 부패·공익신고 상담 및 안내
- ② 부패·공익 침해 행위 신고
- ③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신청
- ④ 신고 및 신청사건 결과조회